

미국 경제 회복 갈 길이 멀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유병규

지난 4여년 동안 한파에 시달리던 미국 경제에 예상치 못한 때 이른 훈풍이 불고 있다. 산업생산 등 실물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증권시장 또한 활기가 엿보인다.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고, 제조업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구매관리자지수(PMI)도 하락세에서 돌아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 2012년 2월에는 52.4를 기록했다. 이 지표가 50을 넘으면 그만큼 경기 확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음을 뜻한다. 실물 경기의 회복세를 반영하여 주가 시세도 호조세다. 미국 뉴욕 증시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다우존스는 2008년 금융위기 전 13,000포인트 대에서 위기 당시 6,500으로 급락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위기 전 수준까지 근접했다. 실물 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주가가 살아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민간조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가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작성하는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 연말부터 상승세다.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다 높여주고 있는 것은 고용 사정의 극적인 개선이다.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10%선까지 급등하였다가 9%대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2011년 10월부터 하락하여 2012년 1, 2월에는 연속 8.3%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1월 이후 36개월만의 최저치다. 이처럼 미국 경제가 오랜 투병 끝에 점차 원기를 회복하고 있으나, 아직은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기술적 반동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전과 같은 체력과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1년 4/4분기에 전기대비 연율 2.0%를 기록했다. 이 역시 2009년말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2011년 2/4분기를 바닥으로 점차 상승 기조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초 시장의 기대치인 2.4%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 달리 경제성장률을 밀도는 수치다. 미국의 최대 소비철인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연말 특수가 포함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4/4분기 소비 증가 의미는 더욱 퇴색된다. 올해에 들어서도 소비 증가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요 소비 품목인 내구재 주문은 연초에 오히려 4%나 감소해 3년만에 가장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예년과 사뭇 다른 따뜻한 겨울 날씨 덕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날씨가 춥지 않아 난방비가 줄고 쇼핑과 여행 등 여가 활동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미국 민간소비 증가 전망을 어렵게 하는 보다 근본 요인은 자산 소득을 결정하는 부동산 시장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 주택 가격은 금융 위기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2011년말 기준으로 위기 직전의 최고가 대비 33%가 하락한 상태다. 집값은 작년 연말에 이어 올해에 들어서도 계속 내려갔다. 금융 위기 전에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려 주택을 구매한 대다수가 아직도 집값보다 빚이 더 많은 처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백악관에서조차 놀랄 정도로 나아지고 있는 고용 사정도 좀 더 속을 깊게 들여다보면 빠른 소비 회복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일단 실업률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 금융 위기 전 4~5%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고용 지표의 착시 현상도 존재한다. 실업률이 신규취업자 증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취업포기자가 늘어나는데도 힘입은 바가 크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구직 포기자가 늘어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고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업의 질도 나쁘다. 실직 후 6개월 이상

재취업이 안되는 장기실업자수가 600만 명을 상회하여 전체 실업자의 40%를 웃돈다. 지난 대공황 시절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 세계 최고로 소문난 미국 동부지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얻는데 최소 1~2년은 걸린다. 고용이 점차 늘어나지만 임금 수준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일자리 증가와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다. 미국 기업들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기업 실적이 미국 내 고용이나 내수 증가에 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또 다른 주가지수인 S&P500에 포함된 대기업들 수익이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3년간 6%에서 9%로 상승했지만, 이 수익 중 외국에서 얻은 비율은 2000년 이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놓고 미국과 외국 근로자들끼리 경합하는 양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의한 노동 수급의 불일치도 미국 경제의 커다란 고민거리다.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과 같은 저학력의 단순 반복 업무 위주 업종에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데 반해 교육, 의료서비스와 같은 고학력의 전문직에는 사람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노동 수급 구조의 양극화는 미국 사회의 계층간 소득 격차를 확대하여 경기 회복 확산을 막는 또 다른 배경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 고용 불안 등으로 실제 미국 소비 시장은 곳곳에서 썰렁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미국 정부기관과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각종 세계 기구가 밀집해 있는 워싱턴 DC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고용 사정이 좋은데도 도심 상가에는 폐업 처분하는 점포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정부 재정의 한계도 미국 경제의 체력 강화에 어려움을 준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민 경기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9,000억 달러에 달하는 2013년 회계연도의 적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국가 부채가 1조 달러 이상 늘어난다고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점도 크나큰 부담이다. 유로 경제권의 재정 악화 지속, 중동 정세 불안에 의한 국제 유가 폭등은 미국 경제의 회생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미연준의 버냉키 의장의 경기 판단은 신중하기 짝이 없다. 경기 회복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고 제로 금리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며 재정 지출 증가 등 경기 진작책에 대한 의회의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 회복 내용은 연말 미국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고용 상황과 대선 결과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들도 눈에 띈다. 현재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업률이 떨어져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실망실업자들이 구직 전선에 속속 들어서게 되어 오히려 연말에는 다시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이 그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재집권을 위해서라도 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터인데, 이같은 노력이 대내외적인 제약 요인과 불확실성 속에서 얼마나 결실을 거둘지가 향후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최대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다.

□ 미국과 중국의 경제 논쟁

미국 경제의 단기 최고 현안은 경기 회복이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핵심 과제는 급부상하는 중국 경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세계적인 주요 경제연구소가 밀집해 있는 워싱턴 DC에서는 중국에 대한 세미나가 빈번히 열리고 연구보고서와 단행본도 쏟아져 나온다. 이들 연구 성과물들을 보면 미국이 중국을 보는 관점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의 팽창에 의한 침식론(eclipse)이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한 경

제, 군사, 정치, 심리적 도전을 여하히 대응해 나갈 것인지 미국 연구계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또 하나는 중국 침체론이다. 중국 경제가 과연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에 대한 정책 조언을 하려고 든다. 중국 학자나 연구자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냉소적 반응을 보인다. 중국의 패권주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물론 중국 경제에 대한 조언에도 날선 반격을 시도한다. 중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모델로 전환해야한다고 미국 연구진들이 정책 제언을 하자, 바로 중국 관계자들은 중국이 수출을 줄이면 당장 물가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이라는 주장을 서슴치 않는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갈수록 경제적으로 이심동체가 돼가고 있다. 미국산 제품이 사라진지 오래인 미국 소비자들은 의식주의 대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 채권의 최대 보유국도 중국이다. 미국에 건너온 유학생 중에서도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중국인이다. 중국은 미국을 발판으로 성장하고 미국은 중국 때문에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그런데도 양국은 서로 상반되는 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철저히 시장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 체제를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로 명명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의문을 제시한다. 이에 아랑곳없이 중국은 자신들의 독자적 경제 체제와 시장 자본주의를 확연히 구분하려 든다. 중국의 관변 경제학자들은 미국 등이 우려하는 주택 버블, 금융 부실 등의 문제를 정부 지도와 규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의 시장 자본주의를 배우는 것은 자국에 별 도움이 안되고 공직에서 출세하는 데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여길 정도다. 두 강대국의 경제 체제와 정책 접근 방식이 서로 확연히 달라질수록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그만큼 높아질 우려가 크다.